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하는 건축·도시 분야 정책 방향

손동필 연구위원, 오성훈 연구위원

요약

- 2015년 9월 UN 총회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정 하였던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비교하여 전 지구적 의제 해결을 위한 세계 모든 국가의 참여를 강조
- 특히 SDGs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은 건축·도시 분야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목표로, 국내 건축·도시 분야 정책의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SDGs 목표 11이 제시하는 가치를 반영할 필요
- 이에 SDGs 목표 11 및 세부지표, 국내 달성 현황 및 예측치 등을 분석하여 SDGs 달성을 위한 건축·도시 분야 정책 방향을 설정

정책제안

- SDGs를 수용하기 위한 범부처 조율, 모니터링, 평가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최상위조정기구로서 'SDGs 정책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 또는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설치하고, 그 하부 조직으로 각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부처별 업무 조율과 정책을 수행
- SDGs 각 분야에 연관되는 법정기본계획을 현실적으로 개선, 조정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단계별로 집행

1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건축 · 도시 분야 영향력 검토 필요성

■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로의 패러다임 전환

-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 2000년 9월 189개국 정상들이 채택한 의제로 ①절대 빈곤 및 기아 근절, ②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③양성평등 및 여성능력의 고양, ④아동사망률 감소, ⑤모성 보건 증진, ⑥AIDS · 말라리아 등 질병 예방, ⑦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⑧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8개 목표로 구성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 지속가능발전은 1987년 UN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 모두를 위해 환경보호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발전을 의미
 - 2015년 9월 UN 총회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SDGs는 ①빈곤 ②기아 및 농업 ③건강 ④교육 ⑤양성평등 ⑥물 ⑦에너지 ⑧경제 ⑨사회기반시설 및 산업화 ⑩불평등 ⑪도시와 정주지 ⑫소비 및 생산 양식 ⑬기후변화 ⑭해양자원 ⑮육상 생태계 ⑯사회 및 제도 ⑰글로벌 파트너십 관련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출처 :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news/communications-material/>

- MDSs에서 SDGs로의 패러다임 전환
 - MDGs가 빈곤과 기아의 퇴치, 보건의 주목적이었다면, SDGs는 지구 전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주요 목적
 - MDGs는 개발도상국을 달성 대상 국가로 한정했으나 SDGs는 선진국 또한 소외되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단순한 협조자나 참여자가 아닌,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

MDGs와 SDGs 비교

목표	MDGs	SDGs
범위	사회발전 중심	지속가능한 발전(경제, 사회, 환경)
달성 주제	극심한 빈곤 감소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
달성 대상 국가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
자원 마련	개발자원 : 공적개발원조 중심 (공여국 → 수원국)	국내공공자원(세금), 공적개발원조, 민간자원 (무역, 투자) 등 다양
감시와 모니터링	자발적으로 이행을 UN에 보고	UN이 주도하여 각 국가의 보고를 권고

※ 출처: 문도운(2015), 「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건축·도시 분야 영향력 탐색 필요

- 국제사회에서 정책 및 자금 흐름의 변화
 - SDGs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이에 따른 지속적인 평가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주요 사업 및 예산의 우선순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사회 전반, 특히 세계적인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변국의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건축·도시 분야에서 SDGs의 영향력 탐색 필요
 -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의 이익과 발전에 부합하면서 SDGs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SDGs 목표 11은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으로 건축·도시 분야를 포괄함
 - 건축·도시 분야 또한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SDGs의 가치를 포함하는 정책으로 변화를 도모하면서, 건축·도시 분야 산업의 활성화 등 국내 의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 이를 위해 국내 전문가 23인에게 SDGs 목표 11의 발전 방향 및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2 SDGs 목표 11 관련 국내 세부지표 및 2030년 예측값 분석

■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 및 지표

- SDGs 목표 11은 크게 7개의 세부목표와 3개의 이행수단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목표별로 달성해야 할 지표를 포함
- 특히 주택, 대중교통, 도시계획, 자연 및 문화유산, 재난 및 재해, 환경, 공공공간 및 녹지환경 등 건축·도시 분야의 주요 지표가 담겨 있음
- 그러나 11.1.1의 예와 같이 SDGs에서 제시하는 지표는 현재 한국에서 수집되지 않는 지표가 대부분이므로, 대체 지표 선정이 필수

SDGs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절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립하고 도시 불량주거지 개선**
 11.1.1 도시 불량주거지나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에 사는 도시 인구 비율
- 11.2 2030년까지 도로안전 개선과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모든 사람들, 특히 취약계층과 여성·아동 그리고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안전하고 비용 수준이 적정하며 접근성 높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제공**
 11.2.1 성별, 나이, 장애에 따라 구분한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 비율
-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계획과 관리 증진**
 11.3.1 인구성장 비율 대비 토지 소요 비율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도시계획과 관리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진 도시의 비율
- 11.4 전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 강화**
 11.4.1 유산의 종류별(문화, 자연, 혼합, 세계 유산 센터 지정), 정부의 단계별(국가, 지방, 자치단체), 지출의 종류별(운영비용/투자), 민간 자금의 종류별(기부, 민간 비영리부문, 후원)로 구분된 모든 종류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 및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는 1인당 종합 비용(공공 및 민간 포함)
-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물 관련 재난을 포함하여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며 GDP 대비 경제적 손실 감소**
 1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실종자, 재난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 수
 11.5.2 핵심 인프라 시설과 기본적인 서비스 중단을 포함하여 GDP 대비 직접적인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 11.6 2030년까지 대기질, 자차 및 다른 주체의 폐기를 관리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인구 1명당 도시에 미치는 환경의 부정적인 효과 감소**
 11.6.1 도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최종 처리되는 고품폐기물 비율
 11.6.2 연평균 대기 미세먼지 수준(PM 2.5와 PM 10, 인구에 의한 가중치)
-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 제공**
 11.7.1 성별, 나이, 장애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공의 이용을 위해 개방된 지역의 평균 비율
 11.7.2 과거 1년 동안 성별, 나이, 장애 정도, 발생장소 등에 의해 구분된 물리적·성적 희롱의 피해자 비율
- 11.a 국가개발계획 또는 지역개발계획 강화를 통해 도시와 도시 주변부 지역 및 지방과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연계성 강화 지원**
 11.a.1 도시의 크기에 따라 구분한 인구증가 및 이에 대한 자원수요를 응합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도입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
- 11.b 2020년까지 통합, 효율적인 자원 활용,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지향하는 통합 정책과 계획이 반영되고 적용된 도시 및 정주지의 수를 증가시키고 샌다이체제의 후속 논의에 발맞추어 모든 관리 수준에서 통합 재난위험관리 체제를 개발하고 실행**
 11.b.1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 중 샌다이체제를 준수하고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설계, 이행 및 점검단계에서 포함된 위험감소 및 복원력 전략을 이행 중인 도시의 비율
 11.b.2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전략이 있는 국가의 수
- 11.c 지역 자재를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건축물을 구축함에 있어 재정적, 기술적 보조를 통한 최빈개발도상국 지원**
 11.c.1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으며 자원 효율적인 건축물의 건설 및 개조를 위해 최빈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의 비율

■ OECD 국가들의 SDGs 세부목표 달성 현황

-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SDSN)는 SDGs 이행을 점검하고 지속가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수(Index)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OECD·세계은행·세계보건기구·IMF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집 중인 데이터에 기반

Country	SDG1	SDG2	SDG3	SDG4	SDG5	SDG6	SDG7	SDG8	SDG9	SDG10	SDG11	SDG12	SDG13	SDG14*	SDG15	SDG16	SDG17
Australia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Austria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n/a	우량	우량	우량
Belgium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Canada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Chile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Czech Republic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n/a	우량	우량	우량	우량
Denmark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Estonia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Finland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France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Germany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Greece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Hungary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n/a	우량	우량	우량
Iceland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Ireland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Israel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Italy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Japan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Korea, Rep.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Luxembourg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n/a	우량	우량	우량
Mexico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Netherlands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New Zealand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Norway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Poland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Portugal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Slovak Republic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n/a	우량	우량	우량
Slovenia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Spain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Sweden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Switzerland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n/a	우량	우량	우량
Turkey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United Kingdom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United States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불량	불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우량

주: 불량, 부족, 우량

OECD 국가들의 SDGs Index 값

※ 출처 : Sachs et al.(2016), Preliminary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DG) Index and Dashboard, Draft version, SDSN working paper. p.17.

- SDGs 목표 11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도시의 연평균 PM2.5 농도와 인구 1인당 사용하는 방의 개수¹⁾로 우리나라의 경우 ‘불량’으로 나타남²⁾
- 그러나 이는 두 가지의 지표를 통해 SDGs의 목표 11을 검토한 것으로, 건축·도시 분야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SDGs 목표 11을 모두 고찰할 필요

■ SDGs 목표 11 관련 국내 세부지표 및 2030년 예측값 분석

-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 중 SDGs 목표 11에서 제시하는 목표와 유사한 지표를 바탕으로 현황 파악

1) 1인당 방의 개수: 1개 미만 불량, 1개 이상 1.5개 이하 부족, 1.5개 초과 우량
 PM2.5 연평균 농도: 20 $\mu\text{g}/\text{m}^3$ 초과 불량, 10 $\mu\text{g}/\text{m}^3$ 이상 20 $\mu\text{g}/\text{m}^3$ 이하 부족, 10 $\mu\text{g}/\text{m}^3$ 미만 우량
 2) 이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몇 년의 추세를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30년의 지표 예측치 도출
 - 전문가들은 국내 유사 지표가 2030년까지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는 것으로 예측
 - 가장 큰 변화가 기대되는 분야는 지표 11.1.1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11.4.1의 자연 및 문화자원 관련 사업, 11.6.2의 미세먼지 농도 저감, 11.7.1의 공공공간의 확대, 11.7.2의 공공장소에서의 범죄 예방 분야

SDGs 목표 11 관련 국내 지표의 현재 수치 및 미래 예측치 비교

SDGs 지표	국내 지표		현재	2030년 예측값	변화 정도*
11.1.1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97.8만 명 (2014년)	32.2만 명	▼ ▼
11.2.1	대중교통 접근시간 비율	5분 이내	14.0% (2015년)	13.0%	▼
		5~10분	44.0% (2015년)	49.4%	▲
		10~15분	29.9% (2015년)	27.9%	▼
		15~20분	6.8% (2015년)	5.3%	▼
		20분 이상	5.3% (2015년)	4.5%	▼
11.3.1	1인당 시가화 면적비율		17.2% (2015년)	17.9%	▲
11.4.1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		0.3% (2014년)	0.7%	▲ ▲
11.5.1	사망 및 실종자 수		2명 (2014년)	32명	▲
	이재민 수		7,691명 (2014년)	30,500명	▲
11.5.2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 비율		0.012% (2014년)	0.020%	▲
11.6.1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		84.0% (2013년)	86.3%	▲
11.6.2	미세먼지 농도		45.8 $\mu\text{g}/\text{m}^3$ (2013년)	28.8 $\mu\text{g}/\text{m}^3$	▼ ▼
11.7.1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		273.5 m^2 (2015년)	352.1 m^2	▲ ▲
11.7.2	공공장소 발생 성범죄 비율		0.4% (2014년)	0.3%	▼ ▼
	공공장소 발생 폭력사건 비율		5.5% (2014년)	4.2%	▼ ▼
11.a.1	도시계획 수립 지역에 사는 인구 비율		90.4% (2015년)	92.2%	▲

* 세모 기호 1개는 완만한 변화, 2개는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며 녹색은 긍정적, 빨간색은 부정적 변화 의미

3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제언

■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체계 마련

- 국가 차원의 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 설치
 - SDGs 체제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인 변화가 발생하므로 개별 사안별로 각각의 조직이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 동력의 측면에서 SDGs 목표의 적용을 총괄할 최상위기획조정기구 필요
 - 예를 들어 세부목표 11.4 ‘전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 강화’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이 주관일 수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업무도 포함
 -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SDGs 이행에 있어 범부처 차원 의견 및 정책 조율을 위해 대부분 최고위급 정부 관료가 주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
 - SDGs 기본방향에 대한 범부처 조율·모니터링·평가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최상위 기획조정기구로 ‘SDGs 정책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로 설치하고, 그 하부 조직으로 각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부처별 업무 조율과 정책을 수행할 필요

■ SDGs 목표 11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 기본계획의 현실화 및 상세한 집행정책 수립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도시기본계획 등 각 분야의 기본계획의 수립보다는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세한 집행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었으며, 효과도 높을 것으로 판단
 - 이는 계획 분야의 실행력과 집행력의 중요성을 드러낸 결과로, 향후 SDGs 목표 11 달성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현실화 및 상세한 집행정책 수립 필요
- 단계별 우선순위 설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 SDGs 목표 11의 각 분야는 주택·교통·도시개발·문화·재해·환경·공공공간·거버넌스·ODA 등 범위가 넓어, 일시에 일괄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움
 - 따라서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차별 집행계획을 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수행할 필요

SDGs 목표 11의 분야별 우선 국내 정책 요약 및 효과 예측

SDGs 분야	우선 국내 정책	효과 순위
세부목표 11.1	1. 사회주거(social housing) 확대정책	3
	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택정책	1
	3. 저소득층 주택 개량사업/지자체 집수리 지원 사업	2
세부목표 11.2	1.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1
	2. 교통소외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	1
	3.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1
세부목표 11.3	1. 일회성 참여가 아닌 장기적인 숙의 과정을 가질 수 있는 참여제도로의 개선	2
	2. 공간계획과 참여예산사업의 연계를 통한 예산권한 주민이양 확대	1
	3.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5
세부목표 11.4	1. 근대 문화재 복원 및 관련 인재 양성	1
	2. 자연유산의 발굴 및 보존, 보호와 이를 위한 교육	2
	3. 문화재별 스토리텔링 강화와 홍보	4
세부목표 11.5	1. 재난별 시나리오와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단계별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 구성	2
	2. 방재의 관점에서 빈곤층과 취약층의 거주환경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1
	3. 주요시설(댐, 제방 등)의 안전기준 강화 및 보강공사 실시	3
세부목표 11.6	1. 미세먼지 저감 정책	5
	2. 미세먼지 발생 현황자료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1
	3. 석탄 기반 화력발전소 폐쇄 및 대체 계획(원자력 제외)	3
세부목표 11.7 (지표 11.7.1)	1. 근린 단위의 소규모 공원 및 녹지 확보 정책	1
	2. 공공공간의 적정 배치를 위한 설치가이드라인 강화	3
	3. 보행자 중심도시 건설 지원	2
세부목표 11.7 (지표 11.7.2)	1. 도심 공원, 운동장 등에 대한 야간 안전방범체계 구축	1
	2. 장소, 범죄, 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사업의 다양화	2
	3. 성폭력 범죄자 신상 공개 및 주민 알람 서비스/사후 관리 강화	3
세부목표 11.a	1. 인근 지자체의 통합된 광역계획 수립 의무화	4
	2.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망 계획 등 광역권 계획 수립	1
	3. 성장관리방안	4
세부목표 11.c	1.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 및 현지에서의 기술 이전	3
	2. 현지 자재 활용을 위한 원조자금의 건설 인프라 사업 비율 확대	1
	3. 최빈국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공법 연구 지원	2

손동필 연구위원 (044-417-9685, dpson@auri.re.kr)

오성훈 연구위원 (044-417-9650, oshud@auri.re.kr)

